

#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오년호 | 부연구위원  
oh.n@krei.re.kr

정학균 | 선임연구위원  
hak8247@krei.re.kr

##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KEY MESSAGE

- ☑ 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 참여, 다층적 자원 확보, 농지 보전을 고려해야 함.

### SUMMARY

-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구조적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햇빛소득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사례는 주민이 소유와 수익의 주체가 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지속성이 높아짐을 공통으로 보여줌.
- 주민 지분 참여 구조의 제도화,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다층적 자원 조달,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농지 보전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음.

# 01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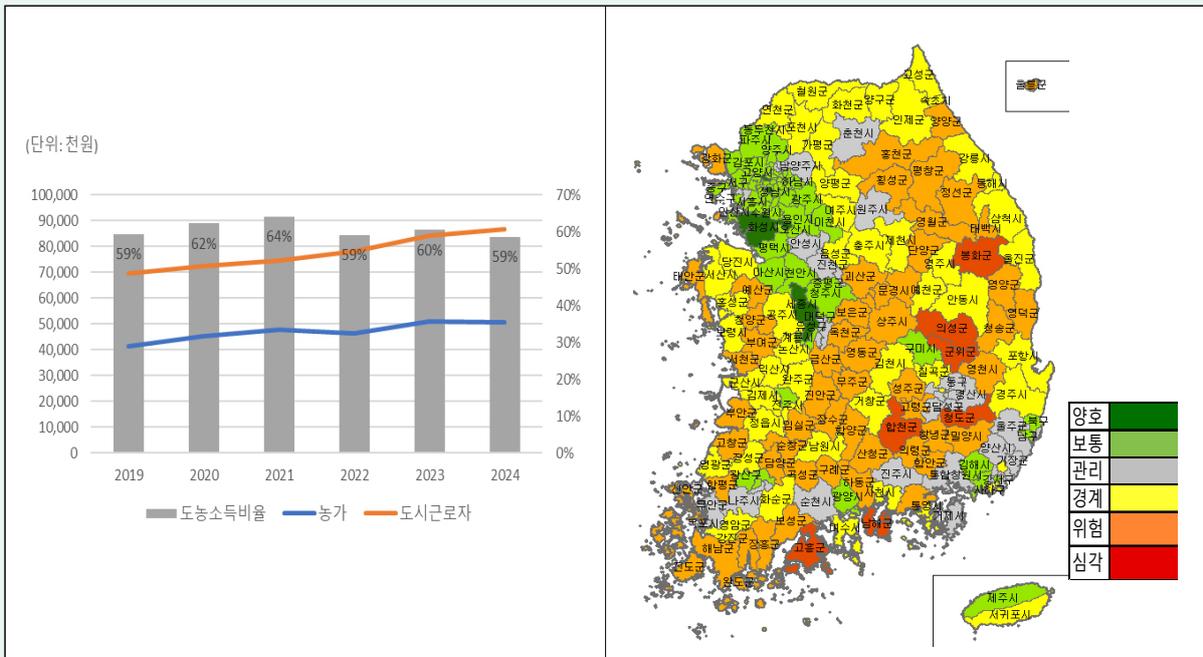


## 햇빛소득 마을 추진 배경

### I 농촌 소멸 위기와 소득 격차 심화

-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구조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음. 현재 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낮은 소득 수준과 삶의 질 저하가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9~2024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6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sup>1)</sup>, 농어촌 주민의 이주 희망 이유 역시 직장 일자리(34.0%), 자녀 교육(13.7%), 의료서비스(12.7%) 등 생활·경제 인프라 부족과 직결되어 있음.<sup>2)</sup>
- 이에 따라 단기적 소득 보전 정책을 넘어, 농촌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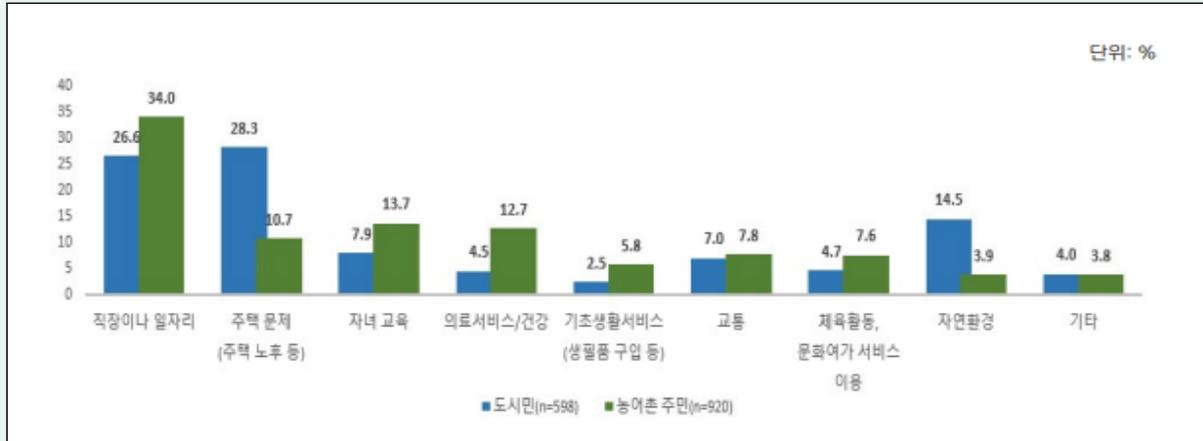
〈그림 1〉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좌), 소멸 위험 기초지자체(우)



자료: (좌) 국가통계포털(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우) 이상호(2025),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가을호, 고용정보원.

1) 국가통계포털(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함.  
 2) 최현우·이진(2024), 2024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 도농 비교(2024년)



자료: 최현우·이진(2024), 2024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I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 한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농촌 부문의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움.<sup>3)</sup>
- ‘햇빛소득(햇빛연금)’ 모델은 농촌 소득 문제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 글에서는 국내외 햇빛소득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촌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 12. 17.),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02 국내 사례



###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sup>4)</sup>

#### I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 모델

-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의 30%를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의 이익공유 모델로 2021년 4월 첫 배당이 지급됨.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나아가 신안군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바람연금’ 도입도 추진 중임.
- 신안군 모델의 핵심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도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것에 있음.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참여 자금을 조달함.<sup>5)</sup> 발전사업자는 대출 진행 과정을 돕고, 전체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함.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원리금을 상환함.<sup>6)</sup>
- 발전시설로부터의 거리 기준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금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며, 수익금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어 소득세 및 기존 정부 지원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임.
- 다만,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계통 연결의 불안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sup>7)</sup>

#### I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모델

-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의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소’ 운영 사례로, 주민들은 2021년 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발전소 지분 100%를 마을 공동체가 보유하는 구조를 구축함.

4) 이강욱(2023), 신안 주민참여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사업 사례 분석,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 협동조합 가입비는 1만 원.

6) 이 외에 지분 참여 방식도 존재함. 이 경우에는 사업지인 염전 임대를 조건으로 주로 염전주들이 참여함.

7) K-공감(2025. 11. 20.), “밥 공짜, 버스 공짜! 햇빛농사로 월 1000만 원 주민과 나눕니다”.

- 2022~2024년 동안 약 16억 7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었음.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바탕으로 조성한 마을 자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사업’<sup>8)</sup>을 통한 대출, 금융권 대출<sup>9)</sup>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함.<sup>10)</sup>
- 발전소 용량은 997.92kW로 월평균 약 11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월 1,0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 차량 운영, 마을 식당, 공원화 사업 등 공동체 복지에 활용됨.

###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sup>11)</sup>

#### I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모델

-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로 확장함. 본 사업은 10세대 이상 농촌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임.
- 포천시 마치미 마을 사례에서는 33세대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에 참여하여 총 495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 이를 위해 가구당 55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월평균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음.

〈표 1〉 국내 햇빛소득 모델 비교

구분	전남 신안군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주도 주체	기초자치단체	주민	광역자치단체
주민 참여 방식	간접 참여(배당)	직접 참여(지분 100%)	공동 참여
재원 조달 구조	주민 출자+담보 금융	마을 자산 출자+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사업’+금융권 대출	경기도(30%)+시·군(50%)+ 주민 부담(20%)
이익 분배 방식	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현금 배당	발전 수익 100% 주민·마을 공동체 환원	전기 판매 수익은 주민 배당, REC 수익은 지자체 회수 후 재투자
정책 성격	개발이익 공유의 제도화	주민 자립형 햇빛소득 모델	정책 확산형 햇빛소득 모델

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환경가치를 인증하는 증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8) 사회적경제 조직에 5억 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제도.

9)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필요한 용수관로 조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논 2필지를 구입한 후,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

10) 시사N(2025. 7. 8.), “‘햇빛 농사로 마을 복지를 짓다’[기후위기 대응 마을을 가다②]”.

11) 경기도 보도자료(2025. 10. 19.), “김동연, 햇빛소득 올리는 포천마을 찾아 “마치미 모델 확대””.

## 03 해외 사례



### 영국 웨스트밀 태양광 협동조합(Westmill Solar Co-operative)<sup>12)</sup>

#### I 주민 소유와 장기 금융을 결합한 모델

- 영국 웨스트밀 태양광 협동조합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소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주민이 재생에너지 자산의 직접적 소유자가 되는 대표적인 햇빛소득 모델임.
- 옥스퍼드셔 지역 12ha 부지에 약 2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연간 약 5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웨스트밀 솔라 파크는 2011년 세워진 뒤, 2012년 주민 협동조합에 의해 약 1,500만 파운드에 인수됨. 자금조달은 지역 주민 대상 공개 공모, 비공개 조합원 출자, 지방정부 연기금의 장기 선순위 채권 등을 결합한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짐.
- 조합원은 약 1,600명으로, 순이익의 80%는 조합원에게 배당되고 20%는 지역 교육·복지·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커뮤니티 기금으로 환원됨. 또한, 정기총회와 회계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 주민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모나드nock 커뮤니티 참여형 태양광(Monadnock Region Community Supported Solar Project)<sup>13)</sup>

#### I ‘지출 절감’형 모델

- 미국 뉴햄프셔주 모나드nock 지역의 커뮤니티 태양광은 그룹 넷미터링 제도<sup>14)</sup>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 모델로서, 체셔 카운티 보존 지구(CCCD)와 모나드nock 지속가능성 허브(MSHub)가 주도하여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재생에너지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됨.
-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농가들이 태양광 발전 전력 지분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함. 각 지분은 약 연간 5,000kWh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며, 가격은 약 3,570달러로 설정됨. 농가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 분할 납부 방식(연 893달러)도 제공되었으며, 지역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활용하여 농가들이 지분을 약 21%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sup>15)</sup>

<sup>12)</sup> REScoop.eu(2022. 6. 30.), “June success story: Ten years harvesting the sun’s energy in Oxfordshire”.

<sup>13)</sup> AgriSolar Clearinghouse(<https://www.agrisolarclearinghouse.org/monadnock-region-community-supported->

- 태양광 발전 설비는 뉴햄프셔주 린지(Rindge)에 위치한 선문농장(Sun Moon Farm)에 설치되었으며, 약 90kW 규모로 운영됨. 프로젝트 초기에는 외부 투자자가 설비를 건설·소유하고, 농가들은 태양광 전력 지분을 통해 발전 전력을 이용함. 발전 전력은 그룹 넷미터링을 통해 참여 농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며, 참여 농가들은 태양광 설비를 자신의 토지에 설치하지 않고도 전력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약 6년 후 농가들이 설립한 법인이 설비를 매입하여 공동 소유권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사실상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 모델은 토지나 자본 제약으로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으며, 햇빛소득을 현금 배당이 아닌 지출 절감 형태로 구현한 것이 특징임.

## 일본 시민에너지치바 주식회사<sup>16)</sup>

### I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한 시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 일본 시민에너지치바 주식회사는 2013년 자본금 90만 엔으로 창업한 시민 주도 기업으로, 일본 지바현 소사시(匝瑳市)를 거점으로 영농형 태양광<sup>17)</sup>을 통한 농촌 재생 모델을 구축함. 소사시 이이즈카·카이하타 지구는 농가 고령화로 버려진 농지가 증가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영농형 태양광 설치 이후 젊은 세대가 이주해 오는 농촌 재생의 거점으로 변모함.
- 초기 자금은 시민 소액 공동출자 방식으로 조달되었으며, 이후 태양광 패널 주인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으로 출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음. 수익 구조는 단순한 매전 소득을 넘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로 설계됨.
- 매전 수익의 일부는 지역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설립된 농업생산법인에 연간 경작위탁료로 지급 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기금 적립을 통해 농지 재생, 창고 건설 등에 활용되고 있음. 나아가 솔라셰어링 농지에서 재배한 대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판매 등 연관 산업과도 연결되고 있음.

solar-case-study/), 검색일: 2026. 2. 20.

- 14) '넷미터링(Net metering)'이란 태양광 발전 후 남은 전력을 전력망에 역송하고 그 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차감받는 제도로, 미국 다수 주에서 운용되고 있음. 그룹 넷미터링은 이를 확장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여러 전력계량기를 하나의 태양광 발전소에 연결함으로써, 자기 부지에 태양광 설비가 없어도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임.
- 15) Community Supported Solar For Farms(<https://www.cheshireconservation.org/solar>), 검색일: 2026. 2. 20.
- 16) Renewable Energy Institute(2025), Revitalizing Agriculture with Solar Sharing.
- 17) '솔라셰어링(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이라고도 불리며, 태양광을 발전과 농업이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대만 평후(澎湖) 난랴오(南寮) 시민발전소<sup>18)</sup>

### I 지역 복지 재원을 창출하는 커뮤니티 기반 태양광 모델

- 대만 평후현(澎湖縣) 난랴오마을(南寮村)은 주민들이 2022년 시민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대만 경제부(經濟部)<sup>19)</sup>와 국립평후과학기술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2025년 총 62.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3곳을 구축함. 이 사업은 주민 공동 출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발전 전력은 대만전력(Taipower)에 판매되고 있음.
- 해당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이 도입됨.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매전 수익은 지역 공동체로 환원되어 노인 대상 식사 지원 서비스와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 복지 사업에 활용될 계획임.

### 〈표 2〉 해외 햇빛소득 모델 비교

구분	영국 웨스트밀 태양광 협동조합	미국 모나드록 커뮤니티 참여형 태양광	일본 시민에너지치바 주식회사	대만 평후 난랴오 시민발전소
주도 주체	주민 협동조합	지역 NGO·농가 연합	시민 출자 기업	주민 공동출자 기반 발전소
주민 참여 방식	조합원 출자에 따른 지분 소유	법인 지분 구매+ 넷미터링 크레딧	시민 출자+ 지역 농가 경작	주민 출자
재원 조달 구조	주민 공개 공모+ 연기금 채권	클라우드 펀딩+ 외부 투자	시민 출자+ 패널 주인 공모	주민 출자+ 정부 보조금
이익 분배 방식	배당 소득+ 지역 기금	전기요금 절감	경작위탁료+ 마을 공동체 기금	지역 복지 사업
정책 성격	대규모 단지의 주민 소유	주민 참여 문턱 완화	농지 보전과 농촌 소득 결합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자료: 저자 작성.

18) 中央通訊社(2025), "經濟部推動公民電廠補助辦法, 澎湖南寮完成首例公民電廠".

19) 대만은 2020년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 공개모집 재생에너지 시민발전소 시범 장려 방안」을 도입하여 주민 공동출자 방식의 시민발전소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홍보 단계 최대 60만 대만달러, 설비 구축 단계 최대 1,000만 대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04 시사점



### 농촌 소득 구조 재편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

#### I 주민을 소유와 수익의 주체로 설정한 제도 설계 필요

- 햇빛소득 정책은 주민을 단순한 수용 주체가 아닌 소유와 참여의 주체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신안군과 웨스트밀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이 발전사업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수익 배분 구조에 직접 참여할 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과 지속성이 크게 높아짐.
- 영국 웨스트밀의 경우 정기총회와 회계 공개를 통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가 장기적 주민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향후 햇빛소득 정책은 임대료 지급이나 일회성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지분 참여와 배당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I 다층적 자원 조달과 공공의 초기 위험 분담

- 햇빛소득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층적 자원 조달과 공공의 초기 위험 분담이 중요함.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에서 도·시·군 보조금이 총사업비의 80%를 부담하는 구조는 주민과 농가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음.
- 일본 시민에너지치바 사례는 소액 시민 공동출자로 출발해 태양광 패널 주인 공모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한 또 다른 접근을 보여줌. 대만의 시민발전소 제도 역시 주민 공동출자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가 설립 준비 단계와 설비 구축 단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초기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REC 제도, 정책금융,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관의 선투자 등을 결합한 자원 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과 농가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I 현금 배당 외 다양한 형태의 소득 구현 방안 마련

- 햇빛소득은 현금 배당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경작위탁료, 공동체 환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책 설계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미국 모나드록 사례에서 나타난 그룹 넷미터링 방식은 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주민도 햇빛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일본 시민에너지치바 사례에서 매전 수익을 경작위탁료와 마을 공동 재원으로 나누어 활용한 방식은, 고령층이나 직접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가 많은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서 햇빛소득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참고할 만함.

## I 농지 보전과 식량안보가 핵심 기준

- 농지 이용을 수반하는 햇빛소득 정책은 식량안보와 농업 지속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함. 구양리 사례에서 전체 설비 중 농지 설치 비중이 68.5%에 달해 식량안보 및 농지 보전 측면의 한계가 존재함.
-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의 작물 수확량이 인근 일반 농지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음. 국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수확량 유지 기준의 제도화, 직불제와의 연계, 품목별·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I 햇빛소득 마을 모형의 유형과 특징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햇빛소득 모형은 추진 주체와 자원 조달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남. 이를 바탕으로 기업 주도형, 지자체 지원형, 공동체 주도형의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 주도형’은 대규모 발전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 공유를 확대하는 방식이며, ‘지자체 지원형’은 공공 재원을 활용하여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특징을 가짐. ‘공동체 주도형’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설립·운영하는 구조로 지역 참여와 에너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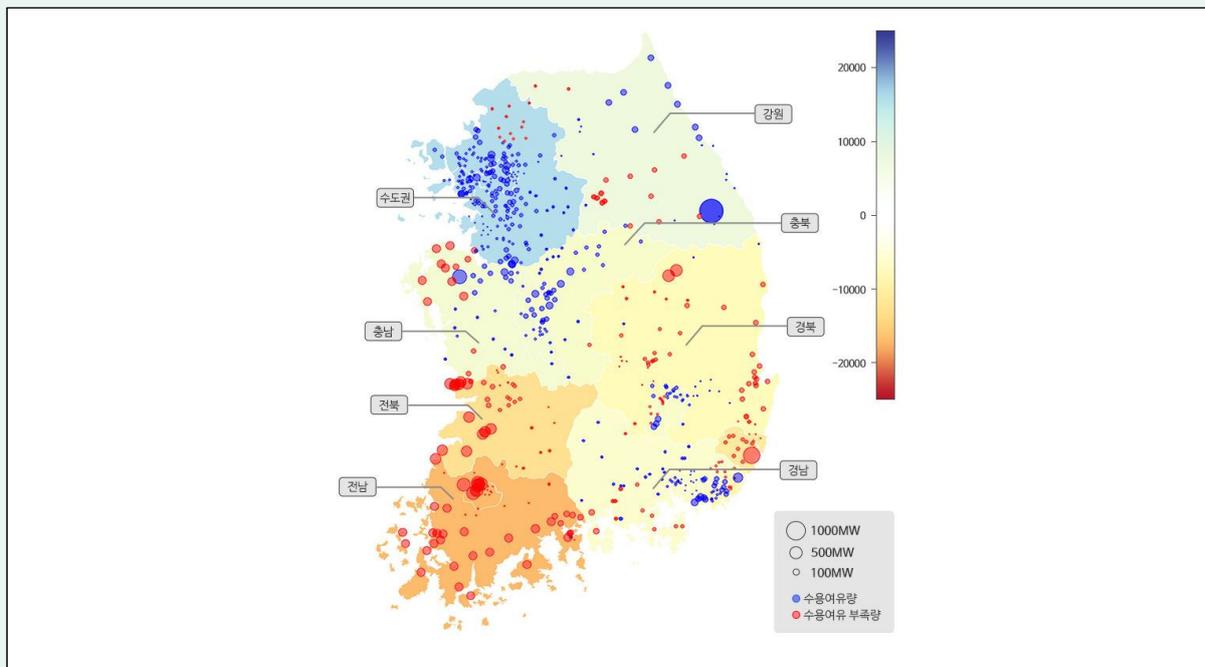
〈표 3〉 햇빛소득 마을 모형

구분	기업 주도형	지자체 지원형	공동체 주도형
주도 주체	기업	지자체+주민	주민
주민 참여 방식	주민 지분/사업비 참여	지자체·주민 공동 참여	주민 출자
재원 조달 구조	기업 투자+금융 대출	정부 지원 +일부 주민 부담	주민 출자 +일부 정부 지원
이익 분배 방식	현금 소득+복지 기금	현금 소득+복지 기금	현금 소득+복지 기금
제한 요소	대규모 부지 확보 및 계통 연계 필요	공공 재정 의존성	초기 자본 및 사업 역량 부족

자료: 저자 작성.

- 다만, 햇빛소득 마을의 확산을 위해서는 계통 접속 제한과 입지 규제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선행 조건으로 요구됨. 권역별 계통수용여유량 전망(그림 3)에서 확인되듯,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관리 방식 개선 없이는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또한, 발전 공기업 혹은 대규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REC 구매 비용에 따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3〉 2026~2030년 권역별 계통수용여유량 전망



자료: 전력거래소(<https://new.kpx.or.kr/recycleEnergy.es?mid=a10403090000&device=pc>), 계통수용여유량 전망.  
 검색일: 2026. 2. 19.

---

**감 수** 김태후 연구위원 061-820-2165 taehoo82@krei.re.kr  
**내용문의** 오년호 부연구위원 061-820-2268 oh.n@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KREI 이슈+

제47호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3.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